2005.11.27 노동부/선관위 시행

행정법총론복원문제

- 하근영 교수

문1. 행정법상 재량행위의 행정적 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직무감사 ② 행정절차 ③ 행정심판 ④ 국정감사

답④

국정감사는 국회(의회)에 의한 입법적 통제이다.
(ipass행정법 270)

문2.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조사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② 행정조사에는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조사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답④

해설

권력적 행정조사의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적 조사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ipass행정법 577)

문3.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허기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그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영업소폐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지도와 유사한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② 공무원이 영업소 폐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영장이 요구된다.
③ 통설은 폐쇄조치를 직접강제로 본다.
④ 폐쇄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답③

영업소의 폐쇄조치는 행정상의 직접강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ipass행정법 570)

문4.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현재의 법령 또는 판례에 비추어 옳은 것은?

- ① 사립학교법인의 소속 교직원에게 대한 징계도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②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권리능력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로 된다.

④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답④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를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① 사립학교법인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 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권리능력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것은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이고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인 처분청이 된다.

(ipass행정법 835)

문5. 행정행위의 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필용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②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의 용인이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사이에 있어서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답④

판례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룰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85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과 과세처분(양도세부과처분)사이에 있어서 하자승계를 인정하였다.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8869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ipass행정부 351)

문6.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경우, 이른바 반사적 이익으로 재판에 의해서 구제받기 어려운 것은?

- ①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에 대한 기존(既存)업자의 이익
- ② 연탄공장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 ③ 자동차 LPG충전소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들의 이익

답①

해설판례는 1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고 나머지는 법률상의 이익(공권)으로 보았다.
(ipass행정부 104)

문7.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의 취하로 심판청구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 ③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답 ④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개정 1995.12.6>) ①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③제2항 전단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8.22>

④재결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

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재결청이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8.22>

⑤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8. 민중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투표인을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민중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 가운데 당사자소송을 준용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고, 소청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부당행위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법률의 규정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답①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ipass행정법900에 그대로 있음)

문9.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에 따르면 허가의 신청과 허가처분 사이에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기준의 변경이 있다면 신뢰보호의 법리상 그 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의사면허는 대인적 허가로 볼 수 있다.
- ④ 허가란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다.

답①

판례에 따르면 허가의 신청과 허가처분 사이에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기준의 변경이 있다면 신뢰보호의 법리상 그 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판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4390 판결) 【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법령이 개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허가신청당시의 허가기준이 아닌 행정처분당시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655 판결)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ipass행정법 312)

문10. 행정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다른 것은?

-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는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족하고 그 신뢰의 보호가치의 유무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 ④ 행정청이 자신이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답 ②

대법원 2005.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ipass 행정법 62)

문11. 다음에 제시된 판례의 관사와 관련이 깊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위법하다.

- ①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
-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③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답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여기서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작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판례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으로 운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최근의 여러 지방직 문제에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설사 몰랐더라도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이라는 표현에서 힌트를 얻었어야 한다.(ipass행정법68)

문12. 행정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법은 의사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과는 달리 일방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성문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 ② 법률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③ 원래 명령은 행정에 의한 입법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중 특별히 법규성을 갖춘 것은 법규명령이라고 부른다.
- ④ 행정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법적효력이 없게 된다.

답 ④

행정법은 효력규정이 없지는 않으나 주로 단속규정(적법요건)을 특징으로 한다.

단속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효력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효력은 지장이 없고(=유효하고) 위법한 처분이 될 뿐이다. (이 경우 처벌의 규정이 있어서 통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ipass행정법 46)

문13. 개인의 명예심을 자극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은?

- ① 관허사업의 제한
- ② 과태료
- ③ 공급거부
- ④ 공표

답④

공표는 성명이나 초상을 공표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위협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다.

문14.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②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③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 ④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답④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그 행사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행정지도는 법적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법적 한계는 있으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ipass행정법 427)

문15.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계획절차
- ② 처분절차
- ③ 신고절차
- ④ 행정상입법예고절차

답①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에 행정계획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행정예고에서 일부의 계획이 예고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행정계획이야말로 행정절차법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고 전 세계적으로 입법화되는 추세인데 유독 한국만 규정에서 제외되어 학자들의 많은 불만을 샀던 것이고 올해만도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출제되었다.
(ipass행정법 678)

문16.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한다.
- ② 직무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을 포함한다는 광의설를 취한다.
- ③ 부작위로 인한 불이익은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 보아 배상책임을 부인한다.
- ④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사와 관계없이 외형주의에 의한다.

답 ③

(대법원 1993.2.12. 선고 91다43466 판결)

선박안전법이나 유선및도선업법의 각 규정은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 보장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 소속 선박검사관이나 시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이 불량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중간검사에 합격하였다 하여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법규에 규정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항하게 함으로써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한

(ipass행정법 703)

문17. '처분'에 대한 판례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판례는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②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폐기물관리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처분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다.

답②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2036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문1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서술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② 이 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사기업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는 없다.
- ③ 이 법은 자연인에 대한 정보에 한하여 적용되고, 또한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와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된 정보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이 법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답 ②

19조 (의견제시 및 권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19. 과태료와 과징금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과징금 부과에는 법률의 개별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②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법원만이 부과·징수하지만,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
- ③ 동일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는 병과(並科)할 수 없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병과한다.
- ④ 과태료에 대한 이의(異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과징금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답 ④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ipass행정법 596) 과징금은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므로 과징금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절차는 없다. 과징금 부과 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 의무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ipass행정법 606)

문20.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 ① 공유수면매립면허
- ② 대집행의 계고
- ③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④ 체납처분상 공매처분

답 ②

②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고 ①③④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공유수면매립면허-특허

대집행의 계고-통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인가

체납처분상 공매처분-대리